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시설사업

실시협약

1997.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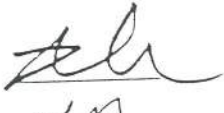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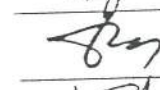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가칭)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

합 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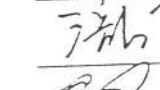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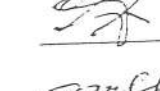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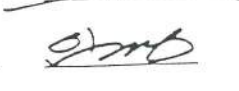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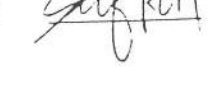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시설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협상단과 (가칭)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 협상단은 붙임 실시협약(안)과 같이 실무 합의하여 이에 서명한다.

1997. 4. 28.

해양수산부 협상단

해 양 수 산 부	항 무 국 장	신길웅	
해 양 수 산 부	항만정책과장	김형남	
해 양 수 산 부	신항만기술과장	이상문	
해 양 수 산 개 발 원	항만개발연구실장	이정욱	
해 양 수 산 개 발 원	연 구 위 원	임진수	
세창합동법률사무소	변 호 사	김 현	
삼 일 회 계 법 인	회 계 사	이태호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 협상단

삼 성 물 산 (주)	부 사 장	서요원	
한 진 건 설 (주)	부 사 장	안 용	
동 아 건 설 (주)	전 무	주권섭	
(주) 대 우	전 무	유계성	
현 대 건 설 (주)	전 무	정상구	
삼 성 물 산 (주)	이 사	임 건	
김 · 장법률사무소	변 호 사	석광현	
안건회계법인	회 계 사	노대섭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정 의)	1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권리)	7
제 4 조	(사업시행의 방법)	8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9
제 6 조	(시설의 귀속)	9
제 7 조	(협약의 성실 이행)	10

제 3 장 실시절차 및 공사시행

제 8 조	(실시계획의 승인)	10
제 9 조	(실시설계 등 사전협의)	11
제 10 조	(업무감독)	11
제 11 조	(출자자의 변경)	11
제 12 조	(건설사업이행보증)	12
제 13 조	(보험가입)	12
제 14 조	(설계감리 및 공사책임감리)	13
제 15 조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14
제 16 조	(공사기간)	14
제 17 조	(공사의 착수)	14
제 18 조	(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	14
제 19 조	(공정보고)	15
제 20 조	(기성검사)	16
제 21 조	(부분준공)	16
제 22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설정)	16
제 23 조	(건설공사의 지체)	17

제 4 장 사 업 비



제 24 조	(총민간사업비)	18
제 25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및 정산)	18
제 26 조	(예비비 및 건설이자)	19

제 5 장 관 리 · 운 영

제 27 조	(부두시설의 유지, 관리)	19
제 28 조	(관리 · 운영계획)	20
제 29 조	(실적보고)	20
제 30 조	(운영비용)	20

제 6 장 사 용 료

제 31 조	(사용료의 징수)	21
제 32 조	(추정물동량 등)	21
제 33 조	(할인율)	21
제 34 조	(사용료의 산정)	21
제 35 조	(사용료의 조정)	23

제 7 장 정 부 지 원

제 36 조	(정부지원)	24
제 37 조	(행정절차)	24
제 38 조	(보상업무)	24
제 39 조	(민원처리)	25
제 40 조	(항만기본시설의 적기 준공)	25
제 41 조	(부두지역기반시설 및 배후단지내기반시설의 적기 준공)	25
제 42 조	(배후수송시설의 적기 준공)	25
제 43 조	(재정지원 등)	26
제 44 조	(기 타)	26

제 8 장 부 대 사 업



제 45 조	(부대사업의 시행)	27
제 46 조	(부대사업의 시행방법)	28
제 47 조	(부대사업의 행정절차)	29
제 48 조	(부대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등)	29
제 49 조	(부대사업을 위한 민원처리)	29
제 50 조	(부대사업과 관련한 기타정부지원)	29

제 9 장 불가항력사유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에 대한 대책)	30
제 52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	30
제 53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조치)	30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54 조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31
제 55 조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32
제 56 조	(협약의 중도해지시의 효과)	34

제 11 장 자금의 차입과 정부의 협조

제 57 조	(자금의 차입)	37
제 58 조	(정부의 협조)	37

제 12 장 기타사항

제 59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38
제 60 조	(법인의 설립)	38
제 61 조	(협약의 승계)	38
제 62 조	(협약의 변경)	39
제 63 조	(권리의무의 양도)	39
제 64 조	(협약의 수익자)	39

제 65 조	(협약의 우선)	40
제 66 조	(일부무효)	40
제 67 조	(적용 법규)	40
제 68 조	(분쟁의 해결)	40
제 69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0
제 70 조	(통 지)	41
제 71 조	(제 목)	41
제 72 조	(비밀유지)	41
제 73 조	(협약의 효력)	42

서 명 란

부 록 I - 사업단 회원사와 예정출자지분

- 별 첨 I - 재무자료
- 별 첨 II - 실시계획의 사업성분석에 적용할 할인율
- 별 첨 III - 준공시점에 적용할 할인율
- 별 첨 IV - 연도별 추정물동량
- 별 첨 V - 사업성분석 조건 및 방법
- 별 첨 VI - 부두지역기반시설 및 정부시행 배후단지내기반시설

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래에서 정의된 사업단은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30일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민자유치촉진법,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신항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산신항만 전체에 대하여 사업사행자를 지정하고, 부산신항만에 대한 본 사업 및 부대사업 중 각 1단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및 단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그 범위는 실시설계의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전 체	1단계	2단계
· 컨테이너 부두	7.5km x 600m	3.2km x 600m	4.3km x 600m
· 소형선(작업) 부두	600m	600m	-
· 다목적 부두	300m x 400m	300m x 400m	-
· 배후부지조성	126만평	104만평 (용원지구)	22만평 (성북지구)

제 2 조 (정 의)

- ①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민자유치촉진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 감리자 : 이 협약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설계 또는 공사의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인을 말한다.

2. 건설이자 :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일 이후 ~~운영권~~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한 이자, 수수료 기타 자본조달 비용을 말한다.
3. 계산사용료 : 시설사업기본계획 4.3.2.의 함수관계식에 따라 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 1단계사업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공사기간 : 부두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부두시설 전체에 대하여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관리운영권 : 부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준공확인후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정받는 준공된 부두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6. 국가계약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말한다.
7. 대주단(들) :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을 말한다.
8. 독점규제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말한다.
9.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0. 민자유치기본계획 :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2호('96. 3. 2.) 1996년도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말한다.
11. 민자유치촉진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말한다.
12.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말한다.
13. 배후단지내기반시설 : 배후부지내에 건설하는 호안 및 가체절제, 간선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후부지 : 본 시설중 부두시설을 제외한 토지로서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지구의 토지를 말한다.
15. 배후수송시설 : 부산신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배후도로(부산신항-대동 및 부산신항-밀양), 배후철도(부산신항-삼랑진) 등 외부지역과 부산신항만을 연결하는 수송시설을 말하며, 진입철도 및 진입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16.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 제1조제2항에 특정된 부산신항만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민자유치사업(본 시설과 2단계시설에 대한 사업을 포함함)을 말하며, '개발'이라 함은 부두시설, 배후부지 및 관련 운영설비의 건설 등을 말하고, '운영'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항만하역사업과 항만시설운영자로서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 등의 영위를 말한다.
17. 본 시설(또는 1단계 시설) : 부산신항만중 부두시설과 그에 대한 배후부지를 말하고, 부산신항만중 1단계로 건설할 시설에 한정되며 2단계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18. 부대사업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제20조, 시설사업기본계획 4.3.5. 및 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부대사업 등을 말한다.
19. 부대사업 시설 : (가) 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지와 (나) 등 부지 및 본 사업에 의해 조성된 배후부지상에 건설하는 관련시설로서 1단계 부대사업 시설과 2단계 부대사업 시설을 말한다.
20. 부두시설 : 본 시설중 (가)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 북컨테이너부두지역에 건설하는 10선석 이상의 컨테이너부두시설 및 소형선(작업)부두와 (나)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남컨테이너부두지역에 건설하는 다목적부두 등 1선석 이상의 부두시설을 말하며, 운영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1. 부두지역기반시설 : 부두시설내의 임항철도, 상수도인입 및 전기인입선로, 연결부두 및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부두시설내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22. 부산신항만(또는 본 사업시설)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조제2항에 기재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및 가덕도 북서안 일원에 건설되는 컨테이너부두 7.5km, 소형선(작업) 부두 600m, 다목적부두 300m 및 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126만평의 배후부지로 구성되는 항만을 말하며, 본 시설(또는 1단계 시설), 2단계 시설 및 운영설비로 구성된다.
23. 부지 :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 또는 부대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산업단지 기타 부지를 말한다.
24. 불가항력사유 : 협약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말하며, 전쟁, 폭동, 혁명, 내란, 지진, 홍수, 해일 기타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포함하되 자연재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5. 사업계획 :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업단이 설립예정법인인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 명의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1996. 12. 24.자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26. 사업기간 : 해양수산부장관이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날로부터 2단계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7. 사업단 : 본 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삼성물산주식회사, 현대건설주식회사, 한진건설주식회사,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 엘지건설주식회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삼성물산주식회사를 대표회사로 하여 구성한 가덕도신항만민자사업단을 말한다. 이 협약 체결일 현재 사업단의 회원사와 각 회원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예정출자지분은 부록I과 같다.
28. 사업시행자 : 민자유치촉진법 및 이 협약 제3조에 의거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9. 사용료 :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두시설 및 운영설비를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모든 사용료, 요금 및 대가를 말하며,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따

른 항만하역요금(또는 하역료)을 포함하되, 하역료 외에 기타 사업 시행자가 징수하는 항만운송사업요금(검수료, 감정료, 검량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0. 산업입지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말한다.
31. 시공사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2. 시설사업기본계획 : 1996. 9. 25.자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7호에 의한 가덕신항만 개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3.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의 건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34. 예비비 : 물가변동비 및 물량변동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35.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본 시설중 부두시설 전체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관리,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36. 운영설비 : 항만시설의 운영 및 항만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시설·화물이송설비 및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시스템 설비로서 1단계 운영설비와 2단계 운영설비로 구성된다.
37. 2단계 시설 : 부산신항만(또는 본 사업시설중)중 본 시설(1단계 시설) 및 운영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
38. 자금차입계약(들)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중 1단계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련 대주단과 체결한 계약(들)을 말한다.
39. 적정사용료 : 부산신항만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0. 제세공과금 : 부두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41. 진입도로, 진입철도 : 배후수송시설과 부두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를 말한다.
42. 총민간사업비 :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두시설의 완공을 위한 사업비에 부두시설과 관련된 운영설비비를 더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3.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서 ~~여유~~를 빼고 예비비와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44. 출자자 :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주를 말한다.
4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말한다.
46. 할인율 : 시설사업기본계획 4.3.2.의 함수관계식에서 각 항목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47. 항만기본계획 : 1996. 7. 20.자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31호에 의한 부산항기본계획(부산신항기본계획)을 말한다.
48. 항만기본시설 : 부산신항만을 위한 방파제, 소형선(작업)부두, 준설투투기장호안, 항로, 진입도로, 진입철도 및 연결잔교 등의 기본시설을 말한다.
49.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50. 항만시설사용료 : 항만법 제27조 및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접안료와 화물장치료(창고·야적장사용료, 특수창고사용료 및 화물체화료) 등을 말한다.
51. 항만운송부대사업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항만용역사업, 물품공급업, 선

박금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등을 말한다.

52. 항만운송부대사업수입 : 항만운송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3.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사업(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을 말한다.

54. 협약당사자 : 사업단이 민관합동법인으로서 설립할 예정인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상호는 변경될 수 있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까지 정부와 사업단을 구성하는 회원사들을 말하고, 민관합동법인 이 법인으로 설립된 후에는 정부와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상호는 변경될 수 있음)를 말하며 사업단의 구성원 또는 출자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55. 회계사 : 대한민국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들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② 이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고, 이 협약 체결일 후 개정이 있는 경우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③ 감리자, 대주단(들), 사업시행자, 시공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해양수산부장관 기타 이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의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권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업단이 민관합동법인으로서 설립할 예정인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상호는 변경될 수 있음)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기타 관련법령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권한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와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다.

1. 이 협약에 따라 본 시설을 건설하고 별도의 실시협약에 따라 2단계 시설을 건설하는 권한
2. 제1호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에정지역내 ~~국유~~ 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부두시설의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부두시설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부두시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하며 부두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
4. 이 협약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및 예선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5. 이 협약 및 별도의 실시협약에 따라 1단계 부대사업 시설 및 2단계 부대사업 시설을 건설, 관리, 운영,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③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이 협약 및 관련 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제한하거나 달리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사업시행의 방법)

- ① 사업시행자는 부산신항만중 이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 1단계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 ② 본 사업중 2단계 사업의 시행일정, 방법 등은 향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감안하여 협약당사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되, 동 협약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 ① 사업시행자의 이 협약에 따른 부두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일단 운영 개시일로부터 50년간으로 하되, 제34조제6항에 의거 사업성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권을 부여한다. 단, 이 협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의 무상사용기간은 제56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부두시설의 부분준공으로 부분운영이 가능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준공부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부분운영을 허용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일로부터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50년의 기간은 이 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부두시설을 조기준공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운영을 허용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권을 부여한다.

제 6 조 (시설의 귀속)

- ① 본 시설중 부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본 시설중 배후부지(단, 도로, 녹지공간 부지 및 공공시설 부지 등 관련법규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은 제외)와 부두시설과 관련된 운영설비 기타 항만법시행령 제17조에 열거된 국가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가 배후부지를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부대사업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 ③ 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시설의 귀속은 제54조 및 제56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조 (협약의 성실 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특히,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및 부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및 공사시행

제 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본 사업중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해양수산부장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실시계획에는 운영설비에 관한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설비가 자동화설비인 경우에는 일반 운영설비와의 경제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실시계획은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과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부산신항만이 신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및 설계감리자의 설계감리보고서
2. 자금차입계획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⑤ 총민간사업비, 사용료, 운영비용 기타 이 협약상 실시계획 승인시 조정, 정산, 산정하거나 결정할 사항들은 각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 정산, 산정 또는 결정하며, 협약당사자는 그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수용한다. 제34조제4항, 제45조제1항 기타 이 협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시 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1단계사업 사업성분석은 별첨V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기로 하고, 협약당사자는 실차계획 승인시 사업성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수용한다.

⑥ 전항에 의한 사업성분석시 또는 사업성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별첨V에 규정된 것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합의를 위한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가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사항을 산정하도록 하고, 회계사가 산정한 사항을 이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⑦ 전항에 따라 회계사를 지정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는 당해 사항의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위와 같은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실시설계 등 사전협의)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중 1계 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용역을 시행할 경우 과업 내용과 용역시행과정의 주요사항(공법, 골재원, 단면, 단가 등)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

제 10 조 (업무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출자자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부두시설을 준공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그 출자자가 가지는 사

업시행자에 대한 지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출자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독점규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동법의 폐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령 또는 조항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들은 이 조의 목적상 단일 출자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에 의하여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변경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건설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내에 부두시설의 준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총민간사업비에서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및 부대비중 보험료·자금차입관련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실시계획 승인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부가 이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보험가입)

①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책임을 지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정부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각종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조건은 동종 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외 보험의 조건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조건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보험금의 처리도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설계감리 및 공사책임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통보한 감리자(들)와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과 이 협약에 의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법규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의 착수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설계자 및 시공자(들)를 해양수산부와 감리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사업시행자는 설계자와 시공자(들) 및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감리자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시행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매 분기의 감리비를 그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예치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감리자가 감리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설계 및 공사 감리자는 설계 및 공사의 전반적인 감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시공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 15 조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에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 대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와 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기간)

- ① 부두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로 한다.
- ② 단, 불가항력 사유, 정부의 귀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제 17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부두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일 15일 이전에 착공계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초 공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부두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8 조 (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부두시설의 공사를 국가

계약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증에서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3자(들)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의 주요조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③ 감리자는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요구 및 제시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지불할 기성부분 중 체불노임을 시공자 또는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관련계약서에 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노임체불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관리정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96. 5. 10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19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정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공정을 관리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매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1월말까지 부두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전년도 시공분이 표시된 설계도서 및 당해연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가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1 조 (부분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부두시설 전체의 준공 전이라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의 부분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에 서 정한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부분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부분 준공확인필증(또는 가사용승인서)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그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운영권등록원부에 등록한다.
- ④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34조의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⑤ 부두시설의 부분준공에 따른 사용료의 순수입이 있는 경우, 운영개시시점에서 무상사용기간 및 계산 사용료 산정시 이를 반영한다.

제 22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설정)

- ①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감리자가 작성한 예비준공검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리자의 준

공검사를 받아 준공검사조서와 최종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민자유치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등록한다.
- ④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후 즉시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부두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23 조 (건설공사의 지체)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부두시설의 공사기간 만료일(이 협약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지체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만료일부터 실제 완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민간사업비(관련 운영설비비 제외)에서 공사기간 만료일까지의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일당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체상금 총액은 총민간사업비(관련 운영설비비 제외)의 10% 상당 금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지체상금 총액이 총민간사업비(관련 운영설비비 제외)의 10% 상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기타 손해는 총민간사업비 산정에 반영하여 준공시점에서 계산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등으로 조정한다.

제 4 장 사 업 비

제 24 조 (총민간사업비)

- ① 총민간사업비는 별첨I의 재무자료에 따라 일단 1996년 불변가기준 21,969억원으로 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결정하기로 한다. 이 때 가격산정의 기준일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 제시한 일자로 한다.
- ② 총민간사업비중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는 실시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 04-105-2, 97.1.1.)에 따라 계상하며, 시공이윤율은 13%로 한다.
- ③ 총민간사업비중 부대비, 보상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실시계획 승인시 협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25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및 정산)

- ① 사업시행자는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설계변경,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 및 기타의 사유로 제24조제2항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자유치촉진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르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사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전에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이 협약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기타 총민간사업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국가계약법 제

19조에 근거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3, 97.1.1.)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방법에 따르며, 지수조정을 산출기준시점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 제시한 일자로 하며, 실시설계 내역서상의 비목군 계수를 적용한다.

- ④ 총민간사업비중 부대비, 보상비 및 제세공과금은 공사기간중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적용하여 준공시점에 정산한다.
- ⑤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정부의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규의 변경내용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다.

제 26 조 (예비비 및 건설이자)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예비비로서 (ㄱ) 공사비의 2%에 상당하는 물량 변동비와 (ㄴ)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민간사업비와 물량변동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물가상승율(5%)을 적용한 물가변동비를 계상하며, 준공시점에 그 때까지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운영개시일 전일까지의 건설이자를 계상하며, 준공시점에 그 때까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 5 장 관 리 · 운 영

제 27 조 (부두시설의 유지, 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부분준공의 경우 준공부분)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당해 부두시설(부분준공의 경우 준공부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부두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항로 및 선회장의 유지준설 등 기타 관련법규상 정부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적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부두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3자(들)에게 대행시킬 수 있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계약의 주요조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대행계약 체결 이후 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부두시설에 대한 정기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 (관리·운영계획)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전까지 부두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말 2개월전까지 다음연도의 부두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실적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매사업연도의 유지보수 실적, 취급물동량, 본 사업·항만 운송사업·항만운송부대사업·예선업, 부대사업 수입 등 관리운영 실적을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보고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열람, 복사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0 조 (운영비용)

법인세를 제외한 부두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의 운영비용은 별첨I의 재투자료에 의거 일단 1996년 불변가기준 46.056억원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제24조제1항에 의한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용을 실시계획 승인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6 장 사용료

제 31 조 (사용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중 부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징수기준을 운영개시일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부분준공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운영을 개시하기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32 조 (추정물동량 등)

-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부산신항만의 물동량은 별첨IV에 제시된 연도별 추정물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별첨IV의 연도별 추정물동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정물동량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제34조 제6항의 운영개시연도에 적용할 최초 사용료와 제1항과 제2항의 추정물동량을 적용하여 준공시점에 연도별 추정사용료 수입액을 산정한다.

제 33 조 (할인율)

- ① 사업성분석 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할인율은 별첨II의 재무자료에 기재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②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공시점에서의 계산사용료의 산정시 적용할 할인율은 공사기간중의 실제 이자율 및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별첨III의 재무자료에 기재된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로 한다.

제 34 조 (사용료의 산정)

- ① 이 협약의 체결단계에서의 계산사용료는 일단 별첨I의 재무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105,698원/TEU로 하며,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실시계획 승인시 계산사용료를 산정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실시설계 기간중에 부산신항만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정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전문가를 선정하여 적정사용료를 산정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 등 전문가가 산정하여 제시하는 적정사용료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사업성분석의 전제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전문가에게 적정사용료의 산정을 의뢰함에 있어 적정사용료의 분포 범위가 아니라 TEU 당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도록 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제2항의 전문가가 적정사용료를 산정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부는 제2항의 전문가가 제시한 적정사용료가 실시계획 승인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계산사용료보다 낮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부두시설의 경쟁력과 본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규모 및 정부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 1단계 사업의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 1단계 사업의 사업성 분석은 별첨V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⑤ 제4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 ⑥ 협약당사자는 준공시점에 (가) 이 협약 제25조에 따라 조정된 총민간사업비와 제4항의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계산사용료를 산정하고, (나) 제2항에 따른 적정사용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및 부산항, 광양항 등 경쟁항만의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두시설의 운영개시연도에 적용할 최초사용료를 결정한다. 이러한 계산사용료가 최초사용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계산사용료와 최초사용료의 차이로 인한 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 1단계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차액 상당액을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 계산사용료가 최초 사용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사용료의 조정)

①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사업연도에 대한 사용료를 직전사업연도 소비자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전사업연도-결산확정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에 이 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근 사용료 조정이 있었던 사업연도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용료를 신고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매사업연도의 실제 사용료 수입액이 제32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당해연도의 추정사용료 수입액의 80%에 미달하거나 또는 120%를 초과하는 경우
2. 부두시설의 운영에 있어 국내외 다른 항만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부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정부의 귀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운영기간중 이자율 또는 환율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자금의 과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가 회계사를 지정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⑤ 전항에 따라 회계사를 지정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는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위와 같이 사용료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부지원

제 36 조 (정부지원)

이 협약 체결 이후에 민자유치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의 관계법규 또는 기본계획의 개정 등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지원조치 또는 제도개선이 도입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정부는 그러한 지원조치가 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7 조 (행정절차)

- ①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관련 도시계획 반영, 해군기지구역내 행위허가 등 시설사업기본계획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본 시설의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② 그 밖에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준설선, 건설장비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부대사업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의 수입 및 사업시행자의 차관도입을 위한 행정절차, 시설설계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38 조 (보상업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두시설에 속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정부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되는 배후부지 지역에 속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보상은 정부가 정부의 부담으로 보상한다.

제 39 조 (민원처리)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민원과 정부가 시행하는 보상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또는 유관부처와의 협조를 거쳐 정부의 책임하에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공사수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한다.

제 40 조 (항만기본시설의 적기 준공)

-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시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부담으로 항만기본시설을 적기에 착공하여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항만기본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시설공사와의 효율적인 연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21조에 따라 부두시설을 부분준공하여 운영개시일 전에 개장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항만기본시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범위내의 항만기본시설의 범위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별도 협의한다.

제 41 조 (부두지역기반시설 및 배후단지내기반시설의 적기 준공)

- ① 정부는 부두지역기반시설 공사 및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배후단지내기반시설 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배후단지내기반시설중 정부가 시행하는 시설의 내역은 호안, 가체절제 및 간선도로 등 별첨VI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21조에 따라 부두시설의 준공부분을 운영개시일 전에 개장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준공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부두지역기반시설 및 배후단지내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2 조 (배후수송시설의 적기 준공)

-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두시설을 적기에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두시설의 운영개시일에 맞추어 정부의 부담으로 배후수송시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21조에 따라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을 운영개시일 전에 개장하는 경우 정부는 준공부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배후수송시설이 완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배후수송시설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별도 협의한다.

제 43 조 (재정지원 등)

- ① 정부는 다음의 경우 민자유치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자금지원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영개시년도의 사업시행자의 실제 사용료 수입액이 제32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추정사용료 수입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더라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5조의 협약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이후 사업시행자의 운영자금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시행자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완료 후 즉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한다.

제 44 조 (기 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사용료가 인가요금체제로 있는 동안 부산신항만이 부산항내 정부가 건설한 ~~컨테이너~~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사용료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컨테이너세가 부산신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실시계획에 따른 부두시설의 예정 운영개시일 6개월 전에 연속된 3년 동안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경쟁항만의 사용료의 추이를 검토하여 부산신항만에 대한 선박 및 화물 입항료의 감면여부와 감면시기 그 기간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한다. 입항료의 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는 부산신항만을 활성화시키고 본 사업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부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항운노조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정상적인 부두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정부는 적극 개입하여 조정역할을 한다.
- ⑤ 현재 정부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예컨대 항로유지준설 등)이 협약체결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더 이상 정부의 부담으로 되지 않고, 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⑥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제21조에 따라 부두시설의 준공부분을 운영개시일에 앞서 개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 ⑦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설트의 외해투기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제 8 장 부 대 사 업

제 45 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부대사업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 규모,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한다. 배후부지를 제외한 기타지역 부대사업에 관하여는 별첨V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한 본 사업의 사업성분석 결과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경우(본 사업 및 부대사업중 각 1단계 사업의 순현재가치(NPV)가 음수인 경우를 말함)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의 규모,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중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실시할 부대사업중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의 계획 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 46 조 (부대사업의 시행방법)

① 부대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부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의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전 체
· 안골단지	21만평
· 가덕배후단지	160만평
· 응동단지	195만평

부대사업은 (㉠) 위 안골단지, 응동단지 및 가덕배후단지의 부지 조성
(㉡) 등 부지의 분양, 임대, 관련시설의 건설, 운영, 분양 및 임대사업과
(㉢) 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진해시 용원지구와 부산광역시 성북지구 부지의 분양, 임대, 관련시설의 건설, 운영, 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포함한다.

② 부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시행방법(위탁시행의 여부, 수탁기관 등) 등이 조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시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별도로 합의한다.

제 47 조 (부대사업의 행정절차)

부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상의 예정지구지정 및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되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48 조 (부대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등)

- ① 부대사업 지역내의 토지, 지장물 및 어업권 등을 포함한 모든 보상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부대사업 지역외의 토지,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은 정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대사업 지역내에 기지를 가지고 부대사업 지역외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가 가지는 어업권중 부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침해되는 어업권은 부대사업 지역외의 어업권으로 본다. 단, 배후부지 지역에 속하는 보상은 제38조에 따른다.
-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사업시행자가 제46조제1항에 기재된 부대사업 지역중 웅동단지에 대한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준설투투기와 관련하여 웅동지역에 기 시행한 어업권보상과 호안축조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보상업무를 민자유치촉진법 및 부대사업에 관한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49 조 (부대사업을 위한 민원처리)

부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단, 정부가 부담할 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민원은 정부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 50 조 (부대사업과 관련한 기타정부지원)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부대사업지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정부는

부대사업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의 수익성 보전이 가능하게 되도록 부대사업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 9 장 불가항력사유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에 대한 면책)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협약당사자는 그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 기타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어느 협약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당해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신속히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53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조치)

- ① 협약당사자로부터 제52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상대방 협약당사자는 지체없이 협약당사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당해 불가항력사유의 치유방안, 공사기간,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기타 이 협약 조건의 변경여부,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협약당사자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 및 부대사업을 통하여 보장된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및 이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③ 협약당사자간에 불가항력사유의 치유방안 또는 이 협약의 변경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이 협약 제55조 제4항에 따른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54 조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이 협약은 제55조에 의하여 증도해지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제5조에 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부두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부두시설에 대한 점유를 정부에 이전하여야 하고, 정부는 그 점유를 취득한다. 시설의 점검 결과 부두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두시설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 이전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부두시설과 관련된 운영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이 조에 의한 협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의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운영설비를 협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적정가치에 의하여 매수한다. (단 사업시행자가 이 조에 의한 협약의 종료이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계속하여 본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 위 운영설비의 적정가치에 관하여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및 정부가 적정가치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56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조에 의한 협약의 종료이후에 부두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설비를 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한다. 협의를 개시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제3자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단서에 따라 운영설비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적정가치에 의하여 매수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이 조에 의한 협약의 종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부두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5 조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 ① 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1호나. 및 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유의 발생과 시정을 통지하여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의 사유중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사업시행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동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함으로써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게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이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 기간내에 협약당사자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협약은 해지된다.

1. 이 협약에 따라 정부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정부에 발송하고 정부가 이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 협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대체할 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3. 정부가 보상의무를 현저하게 지연하거나, 기타 정부지원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의한 본 사업 또는 부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의한 본 사업 또는 부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익을 위한 중도해지 - 민자유치촉진법 제42조의 사유중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 부두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 어느 협약당사자에게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치유방안 및 이 협약의 변경여부 등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만족할 만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그 기간내에 불가항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6 조 (협약의 중도해지시의 효과)

- ① 제55조에 따라 이 협약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중도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 본 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공사기간중의 경우 각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즉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과 항만하역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하며, 무상사용기간은 종료된다. 이 협약의 중도해지시 부대사업의 계속시행여부, 부대사업 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부두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점유를 정부에 이전한다. 시설의 점검 결과에 따른 처리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이 협약이 제5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중도해지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단, 제5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한하고,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와 정부의 귀책사유가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정부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한다.

1. 공사기간중 - 증도해지 당시의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및 관련 부대사업 시설중 각 기성부분의 적정가치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이협약 증도해지 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위 금액에서 협약 해지시점까지의 순수익을 공제한다. 위 20%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건설사업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20%가 되는 것으로 한다.

2. 운영기간중 - 관리운영권 상각 및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증도해지 당시의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및 관련 부대사업 시설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④ 이 협약이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증도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 - 증도해지 당시의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및 관련 부대사업 시설중 각 기성부분의 적정가치에 기성부분에 상응하는 영업권(이 협약이 증도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을 영업권을 말한다)의 적정가치를 더한 금액. 단, 이 협약 증도해지 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분준공된 부두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위 금액에서 협약 해지시점까지의 순수익을 공제한다.

2. 운영기간중 - 관리운영권 상각 및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증도해지 당시의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및 관련 부대사업 시설의 적정가치에 영업권의 적정가치를 더한 금액.

이 협약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증도해지되는 경우 배후부지 및 관련 부대사업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때에는 정부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위 금원에 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⑤ 정부가 지급할 금액의 조정 - 정부가 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이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및 관련부대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동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다.

2. 이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협약당사자와 대주단과의 합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원리금 지급채무를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정부 또는 제3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

⑥ 제55조에 따라 이 협약이 부두시설의 준공확인후에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부대사업의 계속시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또는 그로부터 분양받은 제3자)는 관련 부대사업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7) 제55조에 따라 이 협약이 부두시설의 준공확인전에 중도해지된 경우 또는 (2) 이 협약이 부두시설의 준공확인후에 중도해지된 경우이더라도 사업시행자의 관련 부대사업의 계속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또는 그로부터 분양받은 제3자)의 관련 부대사업 시설의 소유권 보유가 관련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중도해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고 관련 부대사업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

⑦ 전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또는 그로부터 분양받은 제3자)에게 관련 부대사업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은 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하되 '관련 부대사업 시설'의 적정가치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경우 제5항1호의 '관련 부대사업 시설'에 대한 보험금도 공제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⑧ 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시설, 관련 운영설비, 관련 부대사업시설(또는 각 기성부분) 또는 영업권의 적정가치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적정가치를 산정한다.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적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모든 장부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적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모든 장부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위와 같이 해당 적정가치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협약당사자 쌍방은 회계사가 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적정가치를 인정하기로 한다.

- ⑨ 이 조에 따라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의 지급방법은 일시불, 분할지급 또는 기타 다른 지급방법중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정부가 이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합의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미지급금에 대해 이 협약의 증도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제 11 장 자금의 차입과 정부의 협조

제 57 조 (자금의 차입)

-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의 건설을 위한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될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정부는 대주단이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 58 조 (정부의 협조)

정부는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1. 공사기간

2. 사용료의 산정 및 조정기준

3.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항목, 공구별 내용, 투입시기, 금액 산후 정산 사항의 기준금액 및 인정기준)

4. 사용료 산정에 적용될 할인을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 ~~증자~~의 경우 그 납입시기와 납입금액

제 12 장 기타사항

제 59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중 이 협약의 조건과 상이한 사항은 이 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이 협약의 조건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60 조 (법인의 설립)

- ① 사업단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시행자를 법인으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을 위한 자본금과 2단계 시설을 위한 자본금으로 나누어 공사진척에 따라 자본금을 단계별로 납입하되, 타인자본의 차입에 선행하여 전액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후 자금차입계약에 의하여 타인자본의 차입에 상응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대주단과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한 일정에 따라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 61 조 (협약의 승계)

제60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동 법인이 이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동 법인은 정부에게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62 조 (협약의 변경)

- ①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 및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후에 확정하기로 한 항목, 기타 이 협약상 이 협약 체결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이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 체결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이 협약 체결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 및 부대사업을 통하여 보장된 사업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이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63 조 (권리의무의 양도)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로서 대주단에게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협약상의 권리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64 조 (협약의 수익자)

- ① 이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와 사업시행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이 협약상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하여야 할 사항은 사업단이 사업시행자 명의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 65 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이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 66 조 (일부무효)

이 협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위법으로 되더라도 이 협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및 적법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67 조 (적용 법규)

- ① 이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자유치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 68 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이 협약의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전항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이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지방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은 비전속적이고, 협약당사자의 관할합의는 이 협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이의 또는 분쟁이 존속하는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 69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컨테이너부
두공단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 70 조 (통 지)

이 협약상의 통지 또는 최고는 다음의 연락처(단,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부에게 서면 통지하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발송하여야 한다. 모든 통지
는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업단에 계: 삼성물산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참 조: 개발사업본부장

팩 스: 3459 - 8553

전 화: 3459 - 8152

정부에 계: 해양수산부장관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참 조: 항만정책국장

팩 스: 567 - 2186

전 화: 567 - 2185

제 71 조 (제 목)

이 협약상의 모든 조항들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 협약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2 조 (비밀유지)

- ① 이 협약당사자 쌍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 협약의 내용이나 이 협약
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② 무상사용기간의 경과 또는 중도해지에 의하여 이 협약이 종료하더라도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73 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
자로 하여금 이 실시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도록 한 뒤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신 상 우

신 상 우

부록 I에 기재된 사업단 회원사의 대표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명 관

현 명 관

부록 I

【 사업단 회원사와 예정출자 지분율표 】

주 주 명		지 분 율(%)	주요업태 및 업종
삼 성	삼성물산(주)	11.5	도매, 건설외
	삼성생명(주)	7.5	금융보험, 부동산
	삼성전자(주)	5.0	제조, 가전, 통신
	삼성화재(주)	2.5	금융, 손해보험
	삼성중공업(주)	1.0	건설, 선박외
소 계		27.5	
현 대	현대건설(주)	6.5	건설, 토건외
	현대상선(주)	10.0	운보, 해운
	소 계	16.5	
한 진	한진건설(주)	7.0	건설, 토건외
	(주)한진해운	5.5	운보, 서비스, 임대
	소 계	12.5	
동 아	동아건설(주)	9.0	건설, 광산외
	대한통운(주)	0.5	운수, 보관, 도매
	소 계	9.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0	용역외
(주) 대 우		7.0	도매, 건설외
엘지건설(주)		7.0	건설, 건축외
한국중공업(주)		4.0	도·소매, 건설
극동건설(주)		1.5	건설, 임대외
(주)금호건설		1.5	건설, 운송외
대림산업(주)		1.5	건설, 전기외
롯데건설(주)		1.5	건설, 토건외
(주)국제종합토건		1.0	건설, 토목, 전기
합 계		100.0	

별첨 I

재무자료(제24조 1항관련)

1. 본사업 중 부두시설 및 운영설비 관련

(1) 총민간사업비('96년 불변가격기준) : 21,969억원

(가) 조 사 비 : 20억원

(나) 설 계 비 : 204억원

(다) 공 사 바 : 13,389억원(전체 26,227억원중 1단계 13,389억원, 2단계 12,838억원)

(라) 보 상 비 : 0억원

(마) 부 대 비 : 828억원

(바) 운영설비비 : 3,191억원(전체 6,867억원중 1단계 3,191억원, 2단계 3,676억원)

(사) 제세공과금 : 1,619억원

(아) 영업준비금 : 1,273억원

(자) 이 윤 : 1,444억원($\Sigma(\text{가} \sim \text{마}) \times 10\%$)

(2) 예비비 : 8,668억원

(가) 물량변동비 : 268억원

(나) 물가변동비 : 8,400억원

(3) 건 설 이 자 : 7,395억원

(4) 총민간투자비 : 36,587억원

내역 : [총민간사업비(21,969억원) - 이윤(1,444억원)]
+ 예비비(8,668억원) + 건설이자(7,395억원)

(5) 운영비용 ('96년 불변가격기준) : 46,056억원(법인세 26,703억원 별도)

2. 본사업중 배후부지 및 부대사업

(1) 배후부지 : 용원지구(104만평)

(2) 부대사업 : 안골단지(21만평), 용동단지(195만평)

3. 기타사항

세부산정내역등은 별도의 디스켓에 포함되어 있음.

별첨 II

실시계획의 사업성분석에 적용할 할인율 (제33조 제1항관련)

$$1. \text{할인율} = \frac{(\text{가중평균자본비용율} + 1)}{(\text{소비자물가상승율} + 1)} - 1$$

$$2. \text{가중평균자본비용율} = \text{자기자본기회비용율} \times \frac{a}{a+b+c} + \text{원화차입금조달비용율} \\ \times \frac{b}{a+b+c} + \text{외화차입금조달비용율} \times \frac{c}{a+b+c}$$

a = 사업기간(1단계)중 매사업년도말 자본금잔액의합계

b = 사업기간(1단계)중 매사업년도말 원화차입금잔액의합계

c = 사업기간(1단계)중 매사업년도말 외화차입금잔액의합계

자본금잔액, 원화차입금잔액 및 외화차입금잔액은 추정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함

$$3. \text{자기자본기회비용율} = 3\text{년만기은행보증회사채유통수익율(주1)} + \text{위험보상율}(0.65\%)$$

(주1) 사업시행자치정일로부터 12개월간(실시계획신청 연장시는 연장기간 포함)의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상 월별 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유통수익율의 평균

$$4. \text{원화차입금조달비용율} = 3\text{년만기은행보증회사채유통수익율} - \text{스프레드(건설기간 } 1.50\%, \text{ 운영기간 } 1.15\%)(\text{주2})$$

(주2) 실시계획승인일 현재 대주단과 자금차입조건이 결정된 경우는 그에 따름.

$$5. \text{외화차입금조달비용율} = \text{USD 6개월만기 LIBOR금리(주3)} - \text{스프레드}(1.50\%)(\text{주2})$$

(주3) 사업시행자치정일로부터 12개월간 6개월만기 LIBOR금리의 평균

* LIBOR금리: Telerate 3750페이지상의 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서 고시하는
런던 시각 오전 11시 기준의 LIBOR 금리

$$6. \text{소비자물가상승율} = 5\%$$

별첨 III 준공시점에 적용할 할인율 (제33조 제2항관련)

$$1. \text{할인율} = \frac{(\text{가중평균자본비용율} + 1)}{(\text{소비자물가상승율} + 1)} - 1$$

$$2. \text{가중평균자본비용율} = \text{자기자본기회비용율} \times \frac{A}{A+B} + \text{타인자본조달비용율} \times \frac{B}{A+B}$$

A = 사업기간(1단계)기간중 매사업년도말 자본금잔액(주1)의 합계

B = 사업기간(1단계)중 매사업년도말 원화 및 외화차입금잔액(주1)의 합계

(주1) 자본금잔액, 원화 및 외화차입금잔액은 준공년도까지는 매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하며 준공년도 이후는 추정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함.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은 준공시점까지는 매사업년도말의 시장평균환율을 적용하고 준공시점 이후에는 준공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시장평균환율을 적용함.

$$3. \text{자기자본기회비용율} = \text{자기자본기준금리(주2)} + 0.65\%$$

(주2) 자기자본기준금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해의 다음년도부터 부두시설의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한 해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각년도 3년 만기 은행보증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대상기간이 8년일 경우, 1년차의 가중치는 1/36, -----, 마지막 8년차의 가중치는 8/36이 됨). 단, 각년도의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율은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상의 월별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율을 단순평균한 값으로 함.

$$4. \text{타인자본조달비용율} = \frac{C}{D}$$

C = 사업시행자지정일부터 부두시설의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한날의 전일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원화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실제조달비용(주3)의 합계

D = 사업시행자지정일부터 부두시설의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한날의 전일까지의 원화 및 외화차입금(주3)의 매이자지급일 현재 잔액의 합계 ÷ 연간 이자지급 횟수(주4)

(주3) 외화차입금잔액과 이에대한 실제조달비용의 원화환산은 이자지급일의 시장평균환율을 적용함

(주4) 사업시행자지정일부터 운영개시일전일까지의 연간 지급이자지급횟수가 상이한 원화 및 외화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D)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여 이들을 합계함

$$5. \text{소비자물가상승율} = \text{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해의 다음년도부터 부두시설의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한 해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상 각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대상기간이 8년일 경우, 1년차의 가중치는 1/36, -----, 마지막 8년차의 가중치는 8/36이 됨).}$$

五

[illegible]

별첨 V

사업성분석 조건 및 방법 (제8조 제5항관련)

1. 시설사업기본계획 4.3.2의 함수관계식을 기준한 순현재가치법(NPV분석법)에 의하여 본협약 [별첨 I] 재무자료의 일부인 재무모델(재무자료등이 수록된 디스켓)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시점에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성을 분석하되, 본 사업 및 부대사업 중 각 1단계사업의 사업성분석 결과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경우(순현재가치(NPV)가 음수인 경우를 말함) 실시계획승인시 사업의 규모,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2. 본사업중 부두시설 및 운영설비관련
 - (1) 사용료 수입 : 제34조에 의한 적정사용료와 제32조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2) 총민간사업비 : 제24조에 의한 총민간사업비
 - (3) 운영비용 : 제30조에 의한 운영비용에 법인세를 포함함.
 - (4) 예비비와 건설이자 :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액
3. 본사업중 배후부지와 부대사업 관련
 - (1) 부대사업수입 :
 - 부지조성후의 부지의 분양수입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시점에 다음의 평당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인근지역등의 지가상승율은 정부에서 발표한 실시계획 승인전 과거 5년간 전국 평균지가상승율을 적용함.
 - 분양시점은 각 부대사업의 준공후 5년동안 균등하게 분양되는 것으로 함.
 - 용도지역은 실시계획시점의 항만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따르며, 도시계획이나 항만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제시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함.
 - ㉔ 배후부지 (용원지구) : 녹산공단 및 인근지역에 대한 공시지가의 평균금액
 - ㉕ 안골단지 및 응동단지: 기시행된 안골공유수면매립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공시지가의 평균금액
- (2) 투자비 및 제반비용 : 부대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으로 함.
4. 기타사항
 - (1) 부두시설 운영지원 관련수입 : 상기 2와 3이외에 사업시행자가 항만운송부대사업, 예선업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 순수익을 반영함.
 - (2) 법인세 및 각종 부담금등 : 실시계획승인시점의 관련법령등에 따름
 - (3) 할인율 : 제33조의 제2항에서 정한 할인율로 하되 실시계획시점에서 대주단과의 자금차입 조건이 결정될 경우는 그에 따름.
 - (4) 이자율 : 할인율 산정에 반영된 원화 및 외화 자본조달비용
 - (5) 물가상승율 : 소비자물가상승율 연 5%로 함
 - (6) 환율 : 실시계획승인시점의 시장평균환율
 - (7) 기타사항 : 본협약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함

별첨 VI 부두지역기반시설 및 정부시행 배후지원단지기반시설

1) 부두지역 기반시설 (1단계)

공 종	위 치	수 량	비 고
부두내 철도	인입철도 종점 ~터미널부두내	L=6.23km	단 선
상수도용수 분담금		1식	
상수도인입관로	분 기 점 ~1단계 항만지역	D=700mm, L=4.3km D=300mm, L=1.0km	
전기인입선로	녹산NO.2 한전변전소 ~154KV주변전소	L=4.45km	
연 결 부 두	북측컨테이너두 ~남측 다목적부두 연결 안벽	L=400m	

주 1) 기반시설 공종, 수량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세 검토

2) 남측철도 터널 필요성, 연결부두 연장은 남북측부두 간격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2) 배후지원단지 기반시설 (1단계)

공 종	위 치	수 량	비 고
대로 1-1	건마도~육망산 남측	L=3.40km	폭 : 35m
대로 2-1	건마도 남단 ~남측 다목적부두	L=1.70km	폭 : 35m
건 마 교	대로 1-2와 연결되는 교량	L=110m	폭 : 35m
가체절제		L=5.19km	

주 1) 하수처리시설은 부두지역과 배후부지와와의 용량비율에 따라 정부와 민자사업자의 분담액 산정

2) 정부지원 대상사업 위치는 계획평면도 참조

3) 배후지원단지 기반시설, 공종, 수량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세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